



무차별 범죄
4~7면

서이초 사건과
교사 운동
8~10면

국제
소요 참가자들에 보복하는
프랑스 국가 11면
트럼프, 공화당, 미국의 위기 12~13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반대
16면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2~3면

교육 환경 개선하라

교사 감축 철회하라

관련 기사 8~9면





문고지인 대표에 대해 배울 것을 간절히 희망하는 참가자

이번 잼버리에서는 야영지 곳곳에 고인 물과 화상벌레 등 때문에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총체적 운영 부실로 최대 규모인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일부 참가단들의 이탈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을 중단했다.(물론 이번엔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이다.)

이미 야영지에서 철수해 자체로 숙소를 잡은 영국·미국 참가단을 제외한 참가자 3만 70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들로 분산 이동했다.

150여 개 국에서 온 청소년 4만 3000여 명이 대회 조직위 측의 폭염 대책 부재, 위생 등 기반 시설 불량 등으로 대회 기간 내내 큰 고역을 치렀다.

대회 기간 내내 한국 내에서는 폭염 경보(야외 활동 자제)가 매일 발령됐다. 그런데도 잼버리 대회는 기반 시설에서나 행사 운영에서나 폭염 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윤석열이 참석한 개영식 도중에만 100여 명이 응급차에 실려갔다. 대통령 참석 때문에 개영식 입장이 지연된 데다가 가방 검사 등을 하느라고 꾀뚝터위의 야외에서 3시간이나 대기한 참가자도 있었다.

행사 5일 만에 야영지 내 병원을 찾은 인원이 참가자의 10분의 1에 이르

렀다(8월 6일까지 총 4455명). 온열 질환, 피부병, 벌레(끔찍한 화상벌레) 물림이 가장 많았다. 일광화상 환자들도 나왔다. 피부병과 해충 피해가 많았던 건 위생 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그 와중에 비상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난장판" 때문에 대회 현장 소식을 전해 들은 각국 부모들이 자국 스카우트에 항의해 일부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은 직원들을 급히 대회장에 보내기도 했다.

행사 전후로 폭염 등을 이유로 대회 중단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며 강행을 고집했다. 게다가 막상 6월 초 잼버리 조직위 측의 폭염 대비 예산 지원 요구는 거절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이 문제됐는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야영 중단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국가적 행사로) 바뀌었다며 말돌리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손상된 위신과 평가를

만회하려고 긴급을 명분으로 "전시 강제 징발 수준"(금융노조)으로 대처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체·종교시설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이 총동원됐다. 1끼 식사 지원비가 수재민 식사 지원비보다 더 많을 정도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 지시로 급하게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세계 야영 대회가 한국 단체 관광 행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불만 여론 무마에 K팝 인기를 이용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프로축구 일정 변경, BTS 강제 섭외 시도 등의 구설수 속에서 정부는 태풍이 올라오는 주중에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 노동자들을 콘서트 준비에 강제 동원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예산과 임금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이용해 공기업들에게 8월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K팝 콘서트와 폐영식 준비와 진행을 위한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있다. 폭염과 태풍의 이중고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에게 원래 임무와도 무관한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사진: Jean-Pierre Pouteau

잼버리 파행이 단순히 폭염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윤석열 본인이 개영식에 참석해 치적으로 삼으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

▶ 2면에서 이어짐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띄워 놓고 전임 정부 탓

이번 잼버리 재앙은 세계 곳곳에서 온 청소년 4만 몇천 명에게 한국 정부가 고통과 두려움, 실망을 준 사건이다. 중앙 정부와 전라북도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압도적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다. 중앙 정부가 이 행사를 사실상 주관했기 때문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대회 장소가 문제인 정부 때 결정된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준비 부실 탓이라고 주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특히, 잼버리 야영지 새만금 이 위치한 전라북도는 민주당세가 강하고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임을 고려한 책임 전가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위 자체가 애초 정부(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주도로 구성됐다. 여가부 주도로는 불안했는지 올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공동조직위원장에 추가했다. 행정과 안전 등을 행안부가 직접 맡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5인 중 현직 장관이(여가부 포함) 3인이었다.

5월엔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체크했다. 배수, 음식 등을 위해 수자원 공사, 식품안전처 등 범정부적으로 기관들이 동원됐다. 7월엔 국민 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해 아

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게다가 윤석열 본인이 개영식에 직접 참석했다. 1년 반 전에 임기가 끝난 전임 정부 책임하의 못 믿을 행사라면 이 폭염 더위에도 경호도 까다로운 야외 행사에 장시간 대통령이 참석을 했겠는가. 더구나 윤석열은 본인이 보이스코우트 출신이라며 행사를 한껏 띄웠다.

웃기게도, 행사 개막 직전 날 여가부를 통해 조직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 철저 대응”이었다.

웃기지만, 이는 정부 자신도 이 행사를 중시했고 폭염 대책 필요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의 무제한 지원 지시, 100억 원 긴급 지원 등의 조처들이 순식간에 이뤄진 배경일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대책과 행사 운영은 극도로 부실했으니 그 관료적 안일함과 소홀함, 태만에 황당할 뿐이다. 위에서 지시만 하고 대회 개최를 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있었지, 실제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 대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난해부터 제기된 준비

부실론을 그저 정부 흠집내기 정도로 여겨 무시하고, 행사를 두 달 남기고 다급하게 제기된 폭염 대비 시설 예산 요구는 대폭 삭감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책임지고 대책을 다 세워 놓겠다는 여가부 장관의 답변 모습을 다시 보면 기가 찰 뿐이다.

7월 폭우로 야영 예정지가 침수돼 물이 고이면서 위생, 해충, 안전 등의 불안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7월 말 여당 지도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행사를 독려할 때, 지금 같은 사태를 우려하며 행사의 취소나 축소 등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은 전북의 시민 단체들이었다.

결국 이태원 참사 사전경고, 청주 오송 수해 참사 사전경고 등을 무시한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안전 문제 사전경고를 정부가 무시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뒤늦게 정권에 책임의 화살이 날아올 상황이 돼야 범정부적으로 면피용 호들갑을 떠는 것, 그러나 결국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호도되고 무마되고 하급자나 전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다시 비슷한 재난이 일어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술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해지자 잼버리 개최를 이용해 진척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대회 유치 결정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2020년에는 김윤덕 잼버리 공동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과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해창갯벌을 매립할 기회가 없어 진행이 더딘데 잼버리를 계기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갯벌 추가 매립으로 새만금 내 도로들이 증설됐고,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 세력은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대중국용 공군기지와 접해 있어, 위치만 봐도 (제주 2공항 추진 의혹처럼) 미 공군 지원이 주목적인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용도가 전혀 다른 농지조성기금까지 편법으로 동원하며 매립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사달이 난 것이다. 게다가 급한 매립 과정에서 토지 자체가 오염된 듯하다. 그리고 7월 장마 때 침수로 고인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야영지 곳곳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대회 준비를 명분으로 간 해외 연수에서 전혀 상관없는 관광 코스를 다녀 온 일들도 폭로됐다. 공공예산을 눈 먼 돈처럼 쓴 것이다.

전라북도와 지역 유지들은 전북 잼버리 개최를 기업 홍보, 지역 관광업 홍보, 새만금 개발 진척 등에 이용해 이득을 볼 생각만했지 안전은 생각지도 않았다.

GS25는 후원 기업 특혜로 잼버리 영지 내 편의점을 열고 바가지 가격으로 이익을 보려다가 비난을 받고 철회했다.

행사 시설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는 말도 흘러나오는데, 행사 후 대규모 감사가 벌어지면 복마전이 드러날지 모른다.

김문성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 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대중에게는 큰 불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다 하는 식으로 공포와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

경찰은 8월 4일부터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전국의 다중 밀집 장소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였다.

서현역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더니,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서울 강남역에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켰다.

경찰특공대는 방탄 장갑차를 세워놓고 총기를 휴대한 채 강남역 일대를 휘저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변화가에서 계엄 코스프레를 하



윤석열은 중무장한 특공대와 장갑차를 대도시 도심에 출동시켜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다

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총기 발포 포함 경찰 면책권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8월 9일에는 살인 예고 글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을 처벌할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해코지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네 마트에

서 칼을 사는 것도 실명 구입제나 등록제로 한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서현역 범인이 정신질환 의심을 받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추진되고 있다.

보수·우파 언론들은 경찰 지휘부가 강경 진압을 지시해도 일선 경찰이 징계나 검찰의 기소가 두려워 그렇게 못한다면, 과잉 진압 면책권에 대한 지

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

사실 일선 경찰은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결국,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출동한 지 하루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사달이 났다. 흉기 소지로 오인 받은 중학생이 사복 형사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체포된 것이다.

동네 공원에서 후드티를 입고 운동하던 한 중학생을 한 시민이 근거도 없이 흉기 소지자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형사들은 다짜고짜 덮치기부터 했다. 흉기 소지자로 보고 기습 체포를 하려 한 것이다. 난데없는 봉변에 처한 중학생도 최근의 흉기 범죄를 떠올리며 형사들을 피해 도망을 갔다. 그 탓에 그 학생은 폭력적으로 체포됐다. 그 과정에서 중학생의 친구들이 와 사정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진상이 밝혀져 중학생이 풀려날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의 예고편 같다.

범죄 공포가 부추겨지니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편견이 강화되고, 경찰들은 폭력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중학생이 강남·서초구의 부자 동네에서 고가의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다면 형사들이 그런 식으로 체포했을까?

범죄 공포 부추기기와 엄벌주의 방침은 결국 노동계급 등 서민층 통제에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살인 예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온라인 살인 예고 글도 대대적인 단속 대상이 됐다. 200건 가까이 수사가 이뤄지고 59명이 검거돼 8명이 구속됐다. 검거자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이다(34명, 구속은 2명).

경찰은 유동 아이피를 쓴 것만으로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한다. 살인예비죄 적용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공중협박죄 같은 죄를 신설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다. 예전 같으면 무책임한 장난 정도로 비난받고 말았을 행동이 중범죄로 다뤄지는 것이다.

예고된 흉기 난동은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흉기 난동 예고에 장갑차가 출동한 것은 누가 봐도 과시용 쇼이

지 실질적 대책이 아니다. 누군가가 많은 인파 속에서 흉기를 휘두른다고 했을 때 장갑차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 예고 글만 가지고 흉악범죄 취급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인터넷에서 ‘어그로 끄는’ 글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해 자기만족이나 느끼려던 심리적 불안정자라면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에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무력하기 그지없다고 느꼈던 삶에 힘을 느끼게 해 줘 큰 만족감이 든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는 일부 개인들이 특별히 사악한 본성을 타고나서 벌이는 행위가 아니다. 사회의 온갖 모순들과 구체적인 개별적 관계들과 조건이 서로 얽히며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한 사회 현상의 근저에는 사회적 양극화 현실이 놓여 있다. 한쪽에선 가난에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좌절하고, 빛은 늘고 집값과 물가는 올라서 삶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다.

다른 한편, 부정부패로 재산을 불리고 투기로 돈을 벌고는 부자 증세는 “사회주의”라며 난리치는 부유층이 존재한다. 부패나 물려받은 재산으로 더욱 부유해지는 자들이,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패배자 취급한다.

이태원 참사나 청주 오송 수해 참사에서 경찰이 사전경고와 다급한 신고들을 무시한 것은 죄가 안 되고, 실질적인 의사나 행동도 없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은 즉각 구속되는 것도 극도로 부조리하다.

폭염의 맹벌에 무대책으로 노동자들을 야외 노동으로 내몰아 사망에 이르게 해도 그 사용자에게 살인예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법적 불평등 자체가 범죄의 토양이다. 물론 개개 범죄에는 그 고유한 개별적·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토양인 불평등 사회를 수호하면서 범죄를 막겠다고?

▶ 5면으로 이어짐

장갑차로 흥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흥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흥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흥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짬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국 45개 장소에 소총과 권총을 든 경찰특공대원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 사격 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하라고 경찰관들에게 명령했다.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방화·살인 범죄들은 매년 여러 건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특히,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없는 행위인데도 말이다.

온라인 예고 소동은 많은 경우 10대 청소년의 장난이거나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 없이 그저 경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봐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몇몇 흉악 범죄를 과장되게 부각해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



파업 투쟁도 테러로 몰릴 수 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에 투입돼 끔찍한 폭력 자행한 경찰특공대

고 노동계급 등 서민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2022년 8월 23일자)

테러방지법

“테러”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칼날은 저항 운동을 겨냥할 수 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특수부대이다. 그런데 노동자 파업 등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에 거듭 투입됐다. 2000년 롯데호텔 노동자 파업 때 경찰특공대는 호텔 34층 농성장에 진입하려고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창을 깨부셨다.

2008년 용산참사와 2009년 쌍용차

파업 때도 끔찍한 야만적 진압 작전을 펼쳐 사망자를 포함해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경찰특공대는 테러 대응 임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느슨하게 규정한다.

실제 테러에 대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나 군대 등 억압적 힘을 강화하는 조처는 테러를 현저히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파괴성을 악화시킨다.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된 법은 미국의 애국자법이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대테러 전쟁”의 수단으로 도입된

그 법은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인종 차별을 강화하는 데 이용됐다.

특히, “대테러 전쟁”을 내세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 전쟁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낳았고, 이것이 다시 테러로 돌아와 죄 없는 평범한 서방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제 위기, 복지 삭감, 경쟁 강화, 인종 차별, 성별 대립, 전쟁 등 온갖 고통과 분노와 분리를 양산하는 사회에서는 절망하고 좌절한 개인들 중 일부가 비뚤어지고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리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한답시고 경찰력을 강화하지만,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범죄를 끊임없이 낚는 사회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김승주

▶ 4면에서 이어짐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의 사례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무관용과 범죄 질서주의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사회를 낳는다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보도는 경찰이 언론사 사회부 신참 기자들에게 제공하

는 정보에 의존한다. 갑자기 흉악범죄 보도가 늘었다면 심중팔구 경찰이 그 방향으로 정보를 집중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상황은 2009년 용산 참사 직후 이명박 청와대가 ‘군포 연쇄 살인 사건’(강호순 사건)을 부각시켜 용산참사 정부 책임론을 희석시키라고 지시했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친족 비리, 수해 참사 부실 대응, 세계 짬버리 대회 와해 등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범죄 공포 조장으로 지배자들은 진정한 문제들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위축되고 파편화되게 만든다. 도덕적 공포를 부추겨 일부 집단을 속죄양 삼으면,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기도 쉽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폭’ 단속을 핑계로 노조 탄압, 집회 단속 등 민주적

권리 공격도 늘려 왔는데, 이런 강경 우익 기조를 정당화하는 핑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론을 보수화시키는 한편, 경찰이 대중의 보호자를 자처해 지지를 얻어 내려는 책략이기도 하다.

이런 책략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자신이 부패 의혹과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정책으로 불만의 표적이 돼 있다.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홍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도 투입됐다.

경찰은 그후 5일간 104명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고 밝혔다. 40명은 흥기나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난폭하게 체포된 일도 바로 이런 특별치안활동 강조의 효과다.

8월 10일 취임 1주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찰청장 윤희근은 남은 1년 임기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흥기 난동과 같은 홍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

더 일상적인 곳에서 더 자주 경찰의 불심검문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불심검문은 경찰이 보기에 의심스런 사람들을 영장 없이 불러 세워 질문, 수색, 임의동행(일시 체포) 등을 하는 행위다.



범죄 예방 효과 0.0001퍼센트 홍악범죄 수사에서 불심검문이 단서가 된 경우는 극소수다. 8월 8일 강남역을 순찰하는 경찰

그러므로 불심검문을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은 사실 일반 대중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계급 차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는 불심검문 시 경찰의 검색이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마약이나 홍악범죄 예방 또는 수사를

명분으로 하는 경찰의 강압적 요구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대대적인 검문검색 자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거 불심검문 때 좌파 서적이나 생리대 등이 든 가방을 열어 주며 식은땀을 흘리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불심검문 대상이 경찰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데에는 경찰의 편견이 크게 작용한다. 경찰은 불평등한 기존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므로, 경찰의 편견이란 계급·인종 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크게 작용한다.

한때 범죄자 수배 전단에 범죄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으로 묘사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계급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다. 검문검색 장소는 보통, 부유층보다 평범한 대중이 많이 가는 곳일 텐데, 부유층이 오는 곳에서는 평범한 행색을 한 사람이 검문 대상이 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불심검문이 만연하던 시절에는 ‘운동권’ 같아 보이는 청년들이 흔한 불심검문 대상이었다. 그런데 운동권 같아 보인다는 게 뭘까?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심지어 <한겨레 신문>을 들고 있어도 검문 대상이 됐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은 주로 무슬림이나 아프리카·남아시아계 인종들에게 편향돼 있다. 그 나라들에서 경찰의 불심검

문은 그런 집단의 청년들을 낙인 찍는 수단이다.

그러니 불심검문에 걸린 소수 인종 청년들이 격하게 반발하거나 또는 도망가려 하고, 경찰은 그것을 빌미로 총격 등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패턴이 만연하다.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프랑스의 알제리계 청소년 나헬 등이 모두 불심검문 중에 살해당했다.

좀 불편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불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불심검문이 범죄 수사의 단서 구실을 한 비중은 전체 범죄 중 3.9퍼센트를 차지한다. 검거 단서가 된 것은 4.1퍼센트이다. 이것도 적은 게 아닌 듯 보일 수 있지만,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다. 주로 음주운전 단속인 것이다.

홍악범죄 수사나 검거에서 불심검문이 단서가 된 사례는 0.0001퍼센트도 안 된다.

일어난 범죄의 검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불심검문이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어떻게 막는다는 말인가.

불심검문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 생활에 경찰이 더 깊숙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이것이 권위주의의 의미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더 늘고 경찰이 노동계급 등 서민층을 더욱 옥죄는 뜻이다.

김문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흥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흥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흥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흥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로 다 과장해 부추기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흉악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작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 범죄는 전체 범죄의 2.3퍼센트였다.

강력 범죄가 최근 대폭 증가한 것도 아니다. 2005~2021년 통계를 살펴보면, 강력 범죄 중 성폭력을 제외하면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범죄 발생률은 조금씩 감소해 왔다.

통계상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상해 범죄가 왜 벌어지는지는 따져 볼 문제다.

과장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장애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부각하며 범죄자 개인 탓으로 돌리려 한다. 범죄를 사회적 요인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요인만으로 범죄를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개인 간에 벌어지는 폭력·살인 등은 복잡한 매개 요인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범죄의 근원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롯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것이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맞물려서 어떻게 인간성의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지 알아야 한다.

천대와 빈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의 삶과 내면은 황폐해지기 쉽다. 배고파서든, 너무 화가 나서든 일부 사람들이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IMF 경제 위기 시기인 1998년에 범죄율이 급증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직후에도 범죄율이 높아졌다.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생활조건은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범죄의 원인을 가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려 한다

인간적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과음이나 약물 중독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빠지기도 쉽다.

자본주의가 점점 강화하는 경쟁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범죄의 한 요인이다.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 진학, 일자리, 승진을 두고 끊임없이 동료·이웃과 경쟁하도록 부추겨진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갈기갈기 찢어진다. 불황기에는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

서현역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이 생겨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다”며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경쟁이 가하는 압력과 열패감이 그를 비뚤어지게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줬음을 짐작케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발버둥치는 동안 기업주들과 고위 관료와 부자들은 착취, 상속, 각종 투기 등으로 배를 불러 간다. 참사와 산재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도 책임자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분노를 낳기도 하지만, 도덕에 대한 냉소·경멸,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낳기도 한다.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 결정

적인 도움을 준다.

소외는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과 노동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부를 만들지만 자신의 노동조건과 자신이 만든 생산물,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소외 때문에 노동자 등 노동계급 사람들은 매일 무기력과 불안감을 내면화하며 살아간다. 좀 더 안타까운 경우 정신적 장애를 겪는다.

한 번의 실패

그런데 이런 심적 불안과 열패감은 때로 더 약한 상대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분풀이 등이 그런 사례다. 범죄에 대한 무관용 정서의 표출도 그 하나다.

저명한 범죄 문제 전문가인 이창무 교수는 그의 저서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메디치, 2016)에서 군대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벌어지는 심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자신의 결정권과 자율성이 상실된] 심리적 무력감과 마주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강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강하게 작동한다. 힘이 있고] … 누군가를 통제하는 인간이고 싶

은 것이다. 병사들은 2년 동안 자유를 반납하고 위계질서에 편입돼 지위가 가장 낮은 조직원이 된다. … 이들은 박탈당한 자유만큼 … 이를 다른 한편에서 채우려는 것이다.”

이번 신림역·서현역 흥기 난동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이런 소외에 대한 특정 반응이 끔찍한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국내 범죄 56건을 분석한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를 보면, 가해자는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이나 교육·가정 환경, 사회적 지지 등이 결여돼 있는 사람들이다.

범행 당시 직업이 없는 사람이 75퍼센트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종사자였다.

또한 낮은 복지 수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낮은 복지 수준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은 막중하다. …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 자신이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 희망도 없게 된다. 결국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돌리게 되는데, 유형의 실체가 없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격 대신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범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천대와 빈곤 그리고 소외에 짓눌려 망가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다.

물론 천대·빈곤·소외의 끔찍한 압박 속에서도 범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심지어 그런 상황을 바꾸려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가 확 줄어든 사회를 만들려면 엄벌주의도, 공권력 강화도 진정한 답이 아니다.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요인들의 뿌리인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집단적 저항을 통해 유대감과 자신감을 갖고, 분노를 체제와 그 수호자인 지배계급에게 돌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끼며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경찰력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저항을 억압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임준형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왔다. 집회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 당국을 규탄한 까닭이다.

학교 내 갈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며 부산을 떠는 와중에 말이다.

내년 신규 교사 선발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8월 9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공립학교 교사를 8939명을 뽑는다고 한다. 올해보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은 과밀학급 문제를 가중시킨다

다 약 1500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특수교사는 680명을 뽑아 올해(549명)보다 130명 정도 늘긴 했지만, 다른 교사들이 대폭 줄어들면 온갖 특수교육 업무들이 특수교사들에게 쏟아질 게 뻔하다.

이러한 선발 규모 축소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예고된 일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초등 교사 선발을 올해보다 최대 1000명, 중등 교사는 최대 1400명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교사 수를 줄이면, 교사들을 짓누르고 있는 과도한 업

무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서이초 역시 학급당 학생 수가 30.1명으로 과밀학급에 속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서울·경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농어촌과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교

교사 증원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윤석열 정부는 교사 대폭 증원이나 교사 처우 개선 요구는 무시하면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게 문제라며 보수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와,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단체들과 주말 집회 주최측도 이런 법 개정 논의에 골몰하며, 관련 대안을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런 방안들은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미봉책이다.(본지 468호 기사 '교권



교육 인력 총원이 없으면 업무 떠넘기기가 심해질 것이다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를 보시오.)

예컨대, 정부가 내놓은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은 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우려하듯이, 이런 대책은 행정실을 거쳐 교사에게 민원이 전달되는 것일 뿐 민원 업무를 전혀 줄여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 공무직 사이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

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 인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을 내쫓는 방법은 학생을 낙인 찍는 효과만 내고 교육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성 민원이라는 것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악성 민원을 골라 가려내는 것은 가능치 않다.

결국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진보 교육감들은 여전히 피죄죄하다

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지경이다.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교사를 줄여도 소규모 학교의 행정 업무는 별 변화가 없어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교사를 대폭 줄여도 2027년까지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 수준으로 줄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교원정책중점연구소가 발표한 ‘2023~2030 교원수급모델’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초·중등 교원 2만 888명을 증원해야 한다.

늘어나는 학부모 민원,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늘봄 학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고교학점제처럼 학생 맞춤형 수업을 2025년부터 제대로 진행하려 해도, 교사에게 4~5개 과목을 맡길 게 아니라 교사를 대폭 충원해야 한다.

같은 교사와 행정 인력 등을 늘리는 것 밖에 없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업무 감축, 상담·특수 교사 증원 등 교사 처우 개선과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도 모두 외면하던 정부가 몇 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사들의 고통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재정을 쓰지 않고 또다시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이때에 교사 업무 조건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뒤로 미룬다면 중요한 기회를 유실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며, 교육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별 다른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부모 민원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게 전부다.

지금 많은 교사들은 교육부뿐 아니라 조희연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도 규탄하고 있다.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데서 진보 교육감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진보 교육감들이 피죄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단지 이 쟁점에서만이 아니다.

한국의 끔찍한 교육 현실에 넋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은 경쟁 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약속한 진보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었다. 특히, 대중의 가장 큰 바람은 경쟁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제1 공약도 줄곧 입시·경쟁 교육 해소였다.

그러나 특권 학교와 고교 서열 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예를 들어, 3선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은 첫 당선 직후부터 자사고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 지금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 행동의 주요 원인 하나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고충이 늘어나는 데서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파기가 한몫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처우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 당선을 그토록 바랐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이 들어섰지만 바뀐 게 뭐냐?” 하고 반문했던 것이다.

이처럼 ‘진보’ 교육감들이, 개혁을 염원하며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여느 정부 관료들과 별 차이 없이 변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근본 성격, 즉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이자 학교 노동자들의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자본주의 교육제도를 유지·관리하는 교육청의 근본 역할을 수행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 속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교육 개혁의 요구들

을 슬그머니 포기하며 지지층을 배신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의 거듭된 후퇴에도 그에 대한 저항은 시원찮았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몇몇 조합원들은 진보 교육감을 돕고 교육청을 바꾼다며 장학사, 보좌관 등으로 교육청에 들어갔지만 대개 들어간 활동가들 자신이 바뀌었다. 교육청을 견인하라고 파견된 사람들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들었다.(전교조가 비정규직 보호에만 앞장섰다는 세간의 인식은 순전한 오해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비정규직의 염원을 내팽개치는 데도 제대로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싸우려는 비정규직을 탓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전교조가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투쟁을 멀리하고 진보 교육감과 협력에 기대는 동안 노조의 진정한 힘인 조직력과 투쟁력은 점점 약해졌다. 노동자간 분열로 연대도 약화됐다. 그 결과 진보 교육감들은 더 쉽사리 후퇴할 수 있었다. 결국 교육 개혁 성공을 위해서라며 투쟁을 자제한 것이 오히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급진적 대안을 보여 주지 못했고, 교사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급진적 전망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듯이, 최근 학내 갈등이 심화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단지 교육에서의 변화만이 그 원인인 것은 아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강화된 교육 상품화와 노동시장 경쟁 격화는 입시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더욱 치열해진 경쟁 사회는 학생들의 소외와 억압을 더욱 강화시켰고,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뒤틀어 놓았다.

그러나 더한층 근본을 보자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는 경쟁과 차별, 소외, 억압은 교육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종속된 결과이다. 미래의 노동

자들을 위계화된 계급 구조와 노동시장에 배치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 차별적이다.

따라서 최근 학내에서 벌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몇몇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권리 대 권리’의 갈등이 부각되며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만 가려지게 된다.

교사 수를 늘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이런 갈등을 다소 완화하고 교사들의 고충을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자본주의 교육

의 경쟁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에서 비롯하는 온갖 문제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금 같은 혹심한 경쟁 교육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긴축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교사의 노동조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커다랗고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전망 속에서만 개혁을 위한 투쟁도 확산되고 심화되는 게 가능하고 교육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들이 3주째 항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폭염에도 수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덕분에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국민적·국가적 이슈로(다시 말해,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와 운동의 관계라는 오래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정치 배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최 측은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을 했다.

“저희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피켓이 보일 경우 숨겨 달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으고 버스를 대절하며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하는 등 교사들은 실로 자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 집회를 발의하고 주도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매주 집회 신고, 집회 무대 설치, 팸말 제작, 연사 섭외 등을 조직할 수 있었겠는가.

집회 주최 측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나 전교조 등 기존 교원 단체가 조직한 집회가 아니라는 뜻에서 “자발적 집회”를 표방하는 듯하다.

교총은 교장·교감·장학사·교수 등이 고위 임원으로 있고 교육계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교총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

반면, 전교조는 불신을 받는 진보 교육감들과 동행하는 온건한 개량주의적 실천 때문에 뜻있는 소속 교사들의 신뢰가 크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교총과 도매금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좌파적인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12일 4차 집회에서는 교총·전교조를 비롯한 6개 교원 단체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막상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같은 집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집회 주최 측의 “정치색 배제” 방침은 혼란스러운 데가 많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국가에 맞서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주장과 행동 없이 가능하지 않다

연대를 위해

운동에서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다.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되풀이됐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아나키스트인 미하일 바쿠닌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각각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 <권위에 관하여>를 써 논쟁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전개된 대안세계화 운동에서도 자율주의 사상 지지자들은 운동이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거나, 정당이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반이명박 촛불 투쟁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 배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앞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 정치라고 지적한다. 이 말의 뜻은, 정치를 알려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순, 즉 착취와 계급투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정치 영역에는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춰 교사들의 투쟁을 보자.

교사들은 국가(교육부와 교육청 등)를 상대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적 주장과 행동 없이 어떻게 국가에 맞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치 배제”는 공상적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주류 정당들이 집회 주최 측의 “정치 배제”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며 미디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

운동에서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류 정당들의 그런 영향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다.

현실에서 그런 “정치 배제”의 그물망에 걸리는 것은 교사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좌파일 것이다. 노동자 연대 교사 회원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에게 리플릿을 나눠 주자, 집회 주최 측은 “주최 측의 허가 없는 유인물을 받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

리플릿을 받고 안 받고는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데도 주최 측은 “정치 배제”를 내세워 통제하려 했다. 물론 그럼에도 수천 명이 리플릿을 받아간 것을 보면, 참가자들이 모두 “정치 배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운동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것은 공상이며, 실제로는 그 투쟁을 일관되게 응원하는 좌파를 배제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비종파적이고 운동의 대의에 충실한 좌파라면 기본적으로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운동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점에서 좌파 배제는 교사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산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

교사 수만 명이 폭염 속에서 분노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간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는커녕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 재정을 삭감하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투쟁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면 더 크고 넓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광범하고 강력한 연대만이 운동 참가자들에게 싸워 이길 자신감을 줄 것이다.

효과적인 단결을 위해

반대로, “정치 배제”는 운동 참가자들을 효과적으로 결속시키지 못한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정서와 개념, 의식이 공존할 것이다. 아무리 초보적인 수준일지라도 나름의 이론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솔리니 감옥에서 순교한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그람시 말대로 “누구나 철학자다.”

그래서 초기에는 광범한 단결을 이루는 듯하다가도, 운동의 국면이 바뀌는 때 참가자들 사이에서 투쟁 방법이나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다. 어떤 운동이든 중립적인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지 않는다.

가령, 누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의지하려 할 수 있고, 누구는 주말 집회보다 더 강력한 행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때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토론하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운동 리더들이 “정치 배제”를 내세워 참가자들이 상이한 의견을 내는 것을 막으면 운동 내에서 오히려 비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다.

김인식

프랑스 국가가 소요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다

연금 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뒤이어 일어난 경찰에 맞선 소요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저항에 나섰던 사람들을 상대로 보복을 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차례 전국 행동의 날이 열려 많게는 350만 명이 연금 개악에 맞선 맹렬한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총파업을 소명하지 않았다.

마크롱은 약화됐지만 연금 개악을 관철시켰다. 곧이어 6월 27일 17세의 알제리계 고등학생 나헬이 경찰에게 살해됐고 이는 노동계급 지역에서 광범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좌파와 노동조합들은 소요와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소요를 비난했다. 경찰에 맞선 용기 있는 전투를 응원하면서 연금개악 반대 투쟁을 되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흘려 보냈다.

이제 마크롱과 경찰, 사법부는 또다시 저항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가혹한 처벌로 겁주려 한다. 이것이 마크롱을 제거하지 못한 대가다. 얼마 전 프랑스 식민지의 한 곳[누벨 칼레도니]에서 연설한 마크롱은 이번 소요에서 얻은 교훈을 “질서, 질서 그리고 또 질서”라고 요약했다. 마크롱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가족부터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다”

마크롱이 이런 연설을 한 시점은 마르세유에서 4명의 경찰관이 한 남성을 구타하고 “죽을 뻔 하게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들 중 고무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쏜 경찰관의 구속이 결정되자 경찰들은 항의 행동을 벌였다. 경찰청장 프레데릭 보는 “경찰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병가를 내거나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식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국가는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살인에 가까운 잔혹 행위였는데도 경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고 있다. 헤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번 마르세유 경찰 폭력 피해자 역시 북아프리카계다. 헤디는 7월 2일 새벽 친구와 퇴근하다 경찰을 마주쳤다.

경찰들은 폭동 진압용 총으로 그의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프랑스 국가의 탄압은 알제리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다

머리를 쏘고 심하게 구타했다. 그는 턱뼈가 부러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가 혼수상태에 놓인 동안 의사들은 그의 두개골의 많은 부분을 들어내야 했고, 그 결과 두상이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에 따르면 “식물인간이 될 뻔했다”고 그는 언론에 전했다.

여러 저항이 연결돼야

소요 진압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경악스럽다. 7월 1일 밤 경찰은 마르세유에서 “플래시볼”탄을 발사해 배달 노동자 모하메드를 살해했다. 며칠 후 몽생마르탱 경찰은 경비원인 아이멘을 향해 “빈백”을 쏘았다. “빈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납도 들어있는 산탄이고 이를 맞은 아이멘은 여전히 혼수상태다. 또, 경찰은 5명을 실명시켰고 유탄 발사기로 누군가의 손을 날려 버리고 수십 명을 구타했다.

프랑스 경찰은 소요가 일어난 나흘 밤 동안 3400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약 절반이 법정에 섰고, 판사들은 이들 중 95퍼센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 3분의 2에 징역형을 내렸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는 약 600여 명을 구속했다. 지배자들이 시동을 건 부정의의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였다. 노란 조끼 운동과 비

교해 보면, 당시에는 한 해 동안 시위 참가자 3204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400명이 구속됐다.

프랑스의 ‘콩트르 아타크’ 웹사이트는 이렇게 논평했다. “인명 피해, 사법 절차, 배치된 무기 면에서 2023년 6~7월의 탄압은 알제리 전쟁 이후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최악인 점은 무엇인가?”

“이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폭력적 탄압을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탄압이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 변두리에 사는 유색 인종 사람들에게 행사되고, ‘고전적’ 형태의 시위가 아닌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영국에서 ‘저스트 스탑 오일’기후변화에 맞서 석유 사용 금지를 요구하

는 직접 행동 단체에 대한 영국 국가의 맹공격을 두고 영국 좌파와 노동조합들이 보이는 반응과 비슷하다. ‘저스트 스탑 오일’이 2022년 2월 14일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경찰은 2400명 이상을 체포했고 현재 139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재판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노동당 정치인들은 저항의 물결이 지금의 파업에서 환경 운동 탄압 반대와 반(反)노동조합 법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이나 영국 보수당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서는 여러 저항들을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French state wants revenge for riots’ (2023. 8. 8) / 번역 강미령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미국 자본주의의 주요 정당 중 하나인 공화당이 정말 도널드 트럼프를 다음해 대선 후보로 선택할까?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 바이든과 맞붙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공화당의 주요 표밭 주(州) 중 많은 곳에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핵심부가 갈수록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징후다.

오점투성이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기 혐의와 공문서 절도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죄목으로도 공범 여섯 명과 함께 기소됐다. 기소 죄목 중에는 2021년 1월 6일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과 관련된 것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잘못 대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 트럼프의 임기 동안 벌어진 재앙들까지 감안하면, 그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실로 치가 떨리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소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혐의는 주도면밀하게 선정된 것들로, 트럼프 임기 중 저질러진 범죄들에 대한 미국 정치권 핵심부의 책임은 면제해 주게끔 돼 있다.

많은 논평가는 오직 트럼프 개인이 혼자서 미국 정치라는 우물에 독을 푼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시스템 전반은 트럼프의 등장 훨씬 전부터 썩어 있었다.

논평가들이 트럼프라는 악독한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화당이 집권을 위해서라면 늘 더러운 방법도 마다않을 태세를 갖춘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가리는 효과를 낸다.

백인 우월주의

흑인 평등권 운동과 ‘블랙 파워’ 운동이 분출한 1960년대 후반에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대선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닉슨은 스트롬 서먼드를 기용했다. 서먼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뽑힌 상원의원이자 흑백 인종 분리론자들의 거두였다. 서먼드는 “유대인과 검둥이”의 표는 무시하고 대신 “가톨릭 표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가톨릭은 검둥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이 악명 높은 “남부 전략”으로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전략은 들끓던 인종차별적 폭력을 정상적인 것처

럼 보이게 만들고 극우를 공화당으로 결집시켰다.

십여 년 후 공화당 대선 후보 로널드 레이건은 반공과 동성애 혐오, 인종 통합 반대를 설교하는 신진 기독교 우파에 구애했다.

레이건은 기독교 부흥 운동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 우파의 지지를 호소했다. “여러분이 저를 공식 지지 후보로 선정하실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공식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주민 대부분이 흑인과 갈색 인종인 도심의 가난한 동네들을 파탄냈고, HIV/에이즈로 성소수자들이 죽어 나가도록 내버려 뒀으며, 노동조합의 저항을 짓밟았다.

2010년대에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에 반발해 등장한 우

익 운동 티파티와 융합했다. 공화당은 흑인이 어찌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바마는 자신이 무슬림임을 숨기는 “케냐 출신”이고 막후 권력층과 한통속인 자라고 공화당원들과 티파티 참가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아우성쳤다.

그들은 남부연합기[미국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 주들이 사용한 깃발 — 역자]를 펴리며 “마약 · 갱단 · 범죄”를 규탄하는 행진을 했다. “마약 · 갱단 · 범죄” 척결은 인종차별주의자라면 누구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정치적 결집 구호였다.

이런 강경 우익의 시궁창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TV 게임쇼나 진행하는 별 볼일 없는 인물로 정치권 주변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트럼프를 권



사진 출처 Team Trump

트럼프, 공화당, 미국의 위기

트럼프는 여러 건의 소송을 앞두고 있음에도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논평가들이 호들갑 떠는 것처럼 놀라운 일만은 아니라고 유리 프라사드는 지적한다.

많은 논평가는 오직 트럼프 개인이 혼자서 미국 정치라는 우물에 독을 푼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시스템 전반은 트럼프의 등장 훨씬 전부터 썩어 있었다.

좌로 끌어올린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에 따른 심대한 정치적 · 사회적 위기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뒤이은 긴축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세계 최대 보험사들을 “구제”하려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퍼쳤고, 대형 은행들의 파산을 막으려고 막대한 양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자 주가와 배당금이 치솟아 부유층은 더 호사를 누렸다.

1976년에는 미국 최상위 부자 1퍼센트가 국민소득의 8.5퍼센트를 가져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 세대 동안 팽위를 펼친 후에는 최상위 부자 1퍼센트가 국민소득의 20퍼센트 이상을 챙겼다.

부자를 위한 복지는 강화되고 가난한 사람의 복지는 삭감됐다.

산업 부문들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실질 임금이 격감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사회 안 전망은 긴축으로 파탄 났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던 사람들조차 금융 위기 때문에 삶이 망가질 가능성에 직면했다.

오바마는 제너럴모터스 · 크라이슬러 등 휘청이는 자동차 대기업들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는 그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이었다.

불황을 기회 삼아 민주당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도 저임금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랑 끝

트럼프에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준비돼 있었다.

미국이 쇠락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국익을 중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종속시켰기 때문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했다.



사진 출처 Tyler Verder(블라카)

트럼프는 기득권층에 대한 가짜 저항을 선동하는 우익 포퓰리즘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모습

▶ 12면에서 이어짐

트럼프는 백만장자 사기꾼이라는 본 모습을 감추고는 발언권 없는 “미국 사람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본인이 집권하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한 술 더 떠 트럼프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이민자를 막는 장벽을 세우고, 당시 표현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거스르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메시지 덕에 트럼프는 전통적 보수 유권자층(여전히 트럼프 지지층에서 비중이 상당하다)을 넘어, 지지정당을 찾지 못한 투표층과 이전에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일부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표의 약 20퍼센트는 정치권을 증오하는 “엘리트 반대”(《포브스》지의 표현) 유권자층에서 나왔다.

또 다른 5퍼센트는 “무관심층”, 즉 정치 상황을 주시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이처럼 트럼프는 이전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목하지 않던 층에서 수많은 표를 끌어왔다.

공화당이 노동자들에게서도 표를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탓이자, 오바마의 길을 따르겠다고 공약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탓이다.[관련 기사 본지 19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당선에는 오바마 책임도 있다’]

부유층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들어 준 전임 공화당 대통령들과 마

찬가지로 트럼프를 사랑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부유층의 제1선호 정당이었다.

트럼프는 세금과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 주식 시장과 기업 이윤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몇몇 자본가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수사와, 트럼프가 중국·유럽연합 모두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불안해 했다.

기업주들이 보기에 세계화는 미국에 커다란 득이 됐다. 세계화가 없었다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기업주들은 이윤이 계속 굴러들어오는 한 트럼프의 증오 선동과 혼란스러운 정책 결정을 보아 넘겨 줄 태세가 돼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일으킨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만큼은 보아 넘기지 않았다.

이윤

기업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의 독재자들에게 돈을 계속 대 왔다. 미국 지배계급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보아 넘기지 않으려 한 이유는 그런 반란이 지배계급의 힘을 보호하는 정치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자본에 득이 돼 왔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본인이든 본인 소유의 언론사들이든 모두 트럼프의 차기 대선 선거운동을 지지하지



사진 출처 John Ramsdell(블라카)

노예제를 찬성했던 옛 남부연합의 깃발을 흔드는 트럼프 지지자들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독 외에도 많은 지배층 인사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지지가 없어도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공화당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트럼프의 여러 경쟁자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들을 बे끼고 있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응 전략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전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 지지에 대한 거부감도 광범하다는 것에 기대는 것이다. 심지어 공화당 투표층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하다.

둘째, 트럼프가 러시아·푸틴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지휘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호전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우려를 내세우는 것이다.

셋째, 최근 상대적으로 호조인 실업·임금·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수치를 이용해, 트럼프에게 빼앗겼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했던 노동자들의 표를 되찾는 것이다.

넷째, 트럼프 2기 정부가 자행할지도 모를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바이든이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익의 준동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우익을 완전히 꺾으려면 양당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국 좌파에게 한동안 잊힌 것, 즉 계급투쟁에 매진할 훨씬 급진적인 세력이 필요하다.

출처 Yuri Prasad, 'Donald Trump, Republicans and US Crisis' (2023. 8. 4) / 번역 김준호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 요금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제하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경제적 근거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유럽연합이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 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1990년대에 이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 대다수도 국가부채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4퍼센트로, 선진국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도 일본이 곧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우파들은 정부 부채를 적자가 계속 쌓이면 파산을 면치 못하는 가계 부채와 비슷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사실 대출과 부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업들은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 그렇게 조직한 생산으로 노동자들에게서 잉여가치를 뽑아내 이윤이 창출된다. 이 이윤 중의 일부가 은행가들에게 이자로 분배된다. 이자도 노동자들이 만든 잉여가치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심화돼 왔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한 상태에서 자산 거품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다 보니 가계부채도 늘어 왔다.



정부는 국가부채를 GDP의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 기준에 별 근거는 없다.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 일부이다.

자본가들이 도로나 철도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회기반시설을 원할 때, 정부는 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런 시설들에 투자한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다면 이 과정에서 진 정부 부채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종잣돈이 되고, 부채는 충분히 상환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은행가들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빌려 준다. 이는 단순히 대출과 차입에서 멈추지 않는다. 금융 산업은 부채를 재가공하고, 이를 다시 사고팔며 성장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종류의 투자를 “허구적 자본”이라고 불렀다.

이런 금융 투자 붐으로 이윤율이 한동안 높게 유지되기도 한다.

또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동안은 정부의 세금 수입도 증가해, 정부 부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선진국들의 부채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장기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이윤율이 떨어지면 이런 선순환은 지속될 수 없다.

기업 수익성이 나빠져 빚을 갚기 어려워지고,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은행들도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다. 결국 이런 부채의 연

쇄는 자본가들이 파산해 실질적이거나 허구적인 자본 모두를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으로 기업들이 커지고, 몇몇 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면 이런 기업의 붕괴는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 구제

결국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기업과 은행들 대신 정부가 그들의 빚을 떠안는 일이 벌어진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심각했던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30대 재벌 그룹 중 절반이 파산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겪었다. 당시의 고통은 엄청났다.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득을 보며 성장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정부가 대체로 균형 재정을 유지해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자 정부가 기업 지원에 막대한 돈을 쓰며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대량 해고

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 직접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수백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 부채 증가가 문제인 정부 시절 서민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우파들의 말은 거짓이다.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심화돼 왔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한 상태에서 자산 거품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다 보니 가계부채도 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원리를 우선에 두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연일 강조하지만, 시장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 온 부채 위기의 탈출구를 시장에 기대어 찾을 수는 없다.

지난 10여 년간 그리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한 식의 시장주의적 긴축 정책이 추진됐지만 부채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가혹한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더 빨리 수축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막대한 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기업 감세까지 겹쳐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는 무려 83조 원에 달한다.

▶ 15면으로 이어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검사들이 유가려 씨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진실은 이미 2015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무죄를 확정판결한 대법원 판결과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2022년 5월 24일자)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같은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다 사소한 사실 관계를 번복한 것(가령 폭행당할 때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자해에 사용하려 한 유리병이 '비타500'이었는지 두유였는지 따위)을 이유로 유가려 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유가려 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했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같이 있



국정원이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었던 탈북민 A씨가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유가려 씨가 겁에 질려 있고 한쪽 볼이 빨갛게 부은 것을 보고 폭행 피해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배격했다. A씨가 2013년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A씨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었거나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원의 압박과 감시를 매우 크게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외면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명백하게 유가려 씨의 진술에만 불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한 검찰 측도 유가려 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2019년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범죄 입증에 열의가 없었다.

사실, 이번 재판의 담당 검사(서울중앙지검 정진웅)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公安검사 이시원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책임자이

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이시원은 정진웅 덕분에 찻값을 치르기는커녕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지위로 영전했다.

선고 이후 유우성 씨는 이미 수많은 기사와 판결로 국정원 안에서의 가혹 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재판부가 “사소한 말장난을 갖고 무죄를 줬다”며 “간첩이 조작됐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정권에 필요하다면 간첩 조작 같은 공작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히면서 준 메시지였다.

윤석열과 법무부는 유가려 씨가 패소한 9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불법 대선 개입 등으로 감옥살이 중이다)을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원세훈은 온갖 더러운 정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 지시가 드러나 구속됐었다.

그런 공작들을 반복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권의 비호 속에서 국정원은 지금도 ‘간첩단’ 물이에 매진하며 노동운동과 좌파 세력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더러운 손발 구실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법원을 규탄한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임에도 국정원에 맞서 항소를 예고한 유우성, 유가려 씨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보낸다.

김승주

▶ 14면에서 이어짐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가 성장해 세입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부가 말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추진돼 왔지만 약속한 바는 이뤄지지 않고 부채와 불평등만 커져 왔다.

기업 지원 비용의 증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에 대한 긴축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긴축 운운은 노골적인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공격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골적인 긴축 공

격을 비판하며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그들도 근본에서 시장의 이윤 논리를 우선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민의힘과 함께 대규모 기업 감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세 사기 문제에서도 피해자들의 전세금 지원 요구를 금세 외면하고 정부와 타협했다.

부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을 지키려면 이윤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요구를 중시하며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임금과 복지는 늘리고, 평범한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는 탕감하라고 요구하

며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채 위기가 악화해 심각한 금융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갑작스럽게 집이 줄어들거나 음식이나 의약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주택 위기나 식량가격 상승, 의료 서비스 삭감을 낳는 것은 시장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경제를 운영하도록 싸우는 것을 통해 이 정신 나간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기반을 둔

체제의 빛을 지불하기 위한 그 어떤 삭감 조치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정선영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탈리아 인근 난민선 또 침몰,
유럽연합 지배자들 책임이다

★ 왜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지속되는가? — 서방의 이스라엘
후원이 본질적인 문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정부가 핵 폐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핵 폐수 관련 의제가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핵 폐수 방류를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일본 전국어업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어업연합회는 6~7월에 연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뒤로도 경산성, 부흥청 장관이 각각 면담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기시다는 한 달 전부터 어민들과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도 못 잡고 있다. 핵 폐수 방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만났다가는 일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핵 폐수 방류 시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현의 식품에도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은 2021년 기준 일본 수산물 최대(22.1%) 수입처이자 농수산물 전체로 따져도 두 번째로 (2022년) 큰 수입처다. 홍콩 환경부 장관은 수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매년 방사선 검사 비용으로 384만 달러를 써야 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본토로 수입되던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완전 금지했고, 다른 현들의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선 전수 검사를 지시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다. 중국(홍콩 제외)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19.6퍼센트를 차지한다. 지



윤석열 정부도 한미일 동맹과 핵발전 확대 정당화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난 9일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핵 폐수 배출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는 공식 질의서를 일본에 보냈다.

“어업인과의 신뢰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기시다는 말에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분노를 표한 이유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8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계산

기시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한편, 미국과 한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힐 계산을 하고 있을 법하다. 윤석열 정부는 핵 폐수 방류와 무관하게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지만, 기시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 폐지도 이런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 폐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정했지만,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정상회담의 성명이라든지 이것 부분은 명확히 오보”라며 말끝을 흐렸다.

40회를 넘긴 정부 브리핑은 이제 질문도 거의 없는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나 할 말이 없는지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한국 해역의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기시다 정부에 협력하는 한편, 국내외 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돼 온 후쿠시마 사고 증거인멸에 협조하려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핵 폐수 방류를 선명하게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

지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핏대를 세운 것도 15년 전 촛불 운동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시다도 마찬가지다. 기시다는 8월 6일 78주년을 맞은 나가사키 ‘원수 폭 금지 세계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핵 폐수 문제가 거론될 듯하자 태풍을 핑계로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인 26.6퍼센트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오류 문제에 관한 불만이 가장 크지만, 핵 폐수 방류 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준 듯하다. 기시다는 9월 11~13일에 개각을 예고했다. 그 전에 방류를 시작하고는 속죄양 삼아 경산성 장관 등을 해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일 핵 폐수 동맹의 계획이 뜻대로 이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일 양국에서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상호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핵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 일본 방문단’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에서 일본 단체들과 간담회와 항의 행동 등을 벌였다.

8월 12일 서울 시청 인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도 “총력 단결해 ‘日 핵 오염수’ 배출 저지할 때”(이재명 대표)라며 전국 시도당별로 대책위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한미일 핵 폐수 동맹은 강력하기는 커녕 곳곳에서 강경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한다.

장호중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8월 16일(수) 오후 8시
발제 정원석 현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

참가신청 bit.ly/0816-meetings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